21대 국회 첫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여부 '주목'

민주, 의총 열어 박진 해임안 당론 발의

조문 불발, 한일 · 한미 정상 만남 등
박홍근 원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당부
진성준 의원 "29일 본회의 가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첫 해임건의안 발의인데, 역대 일곱번째 가결 사례가 될지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엔 "박 장관은 9월 18~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와 사적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대면 미성사,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 다섯 사례가 지적됐다.

그러면서 순방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력 촉구하면서 정부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고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는 "무능보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과 책임적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 문제 발언에 대한 대응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오는 9월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21대 국회 첫 발의 사례이다. 제헌 국회 이래로 국무위원 불신임 또는 해임건의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가결이 이뤄진 경우는 여섯 차례로 추려진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경민 전북도역사문화교육원장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 인봉리 유적 · 유물조사를"

김경민 전북역사문화교육원장 "후백제견원 왕궁터"

전주시 인봉리의 후백제 왕궁터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유적 유물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를 지낸 김경민 전북도역사문화교육원장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는 천년고도 후백제의 도읍지로 그중 인봉리는 후백제견훤왕궁터로 유적·유물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원장은 "후백제 견훤왕궁터는 노송동 일대에 방대하게 펼쳐져있다."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후백제의 문화재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후백제왕궁복원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었고, 우범기 현 전주시장의 공약이었다"며 "최근 우 시장인 역사적 인식을 망각한 채 개발에만 방점을 두고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 제고에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문화재 발굴조사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이 법률 상으로도 이행해야한다."며 "전주시와 재건축 조합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낙후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유적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원장은 "문화재청은 견훤왕궁터에 유적 유물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에 맞는 고적복원과 박물관 건립을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중기 인력지원 개정 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수근로자 선발 대상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3년 정도임을 고려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사업과 우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무로만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수근로자 근로자 선발 근속년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만들기 초석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 개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만들기를 위한 '제1회 전라북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가 전북도의회에서 27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12대 도의회 의정 목표인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위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를 강사로 초청,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정 교수는 지방소멸지역 한달살이 경험과 '재생, 로컬, 연결, 행복'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경남 하동 양양면 매계마을 마을호텔, 전남 신안군 도초도 섬마을 인생 학교,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 등 각 지역의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마을과 도시는 물건이 아닌 서로 연결된 한 몸의 생명체로 원활한 흐름,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건강한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덩치를 키운 메가시티보다 연결을 강화한 소도시 연합모델과 전북BRT(Bus Rapid Transit, 간섭급행버스) 노선"을 제안했다.

강의에 앞서 국주영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도민에게 신뢰받으며 도정을 충실히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제12대 전북도의회로 거듭나는 게 소망"이라며"전북도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완주 통합 불발시 대안 마련해야"

천서영 전주시의원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전주·완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시청사의 완주 이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합 불발에도 미리 대비 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전주시의회 천서영(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무산시 신속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1983년 건립한 전주시청사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 1만9,000㎡보다 8,000㎡ 부족한 1만1,000㎡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 부족함이 매우 큰 상황이다.

좁은 청사 공간으로 인한 주차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본청 주차장 139면은 법정 주차 면수인 117면보다 겨우 20여 면 많은 정도다. 그나마 주차면 중 96대분은 관용차와 직원들의 정기등록 공간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증권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만 40여억원, 매년 임차료 2억7,000여만원, 관리비 9억8,0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역시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 조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인근의 사무실을 빌려야 할 처지다.

천 의원은 이런 문제를 들어 "전주시는 이제 청사의 신축·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통합을 전제로 시청사의 완주 이전을 공약했지만 양 지자체의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사례를 보면, 마냥 통합에 따른 청사진에만 부풀어 있을 일이 아니다"면서 "완주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되,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제시한 플랜B는 구도심의 황폐화를 막는다는 틀에서 나왔다.

그는 "청사 건너의 옛 선미촌 일대를 재개발해 그곳에 시청사를 이전·신축하거나, 시청 일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현 청사 자리를 재건축하는 등 몇 가지 대안적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사에 대한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엄청난 시간을 또 낭비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며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수산자원 보호 위한 어도 대부분 '개보수' 필요"

민주 윤준병 의원, "올해 전국 5560개 중 68% 기능 불량… 매년 24개 어도만 개보수"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처럼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인 '어도'가 전국에 5,560개가 있지만, 정작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으로 인해 개보수를 해야 하는 어도가 전체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24개에 불과한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체계적인 어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도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고,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지역은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 사업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2021년 3년간 매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의 24개의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올해 역시 기능 불량인 24개의 어도만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하천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매년 2억원을 들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실시·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홈페이지) 내 올해 게시된 건은 2021년 8월 만들어진 '2021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교육자료'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매년 2억원씩 투입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교육자료를 올해 3월 게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게시된 건이 없다"며 "해양수산부는 유명무실한 어도관리체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 수산자원 보호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새만금청, 동아시아에 새만금 방조제 우수성 알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27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동아시아 댐 기술교류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방조제의 우수성과 새만금 사업의 미래가치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현장 방문 행사에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댐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33센터,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용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설명하고,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소개했다.

현장을 둘러본 댐 전문가들은 1991년에 시작하여 2010년 준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 건설과정 등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경수 기자